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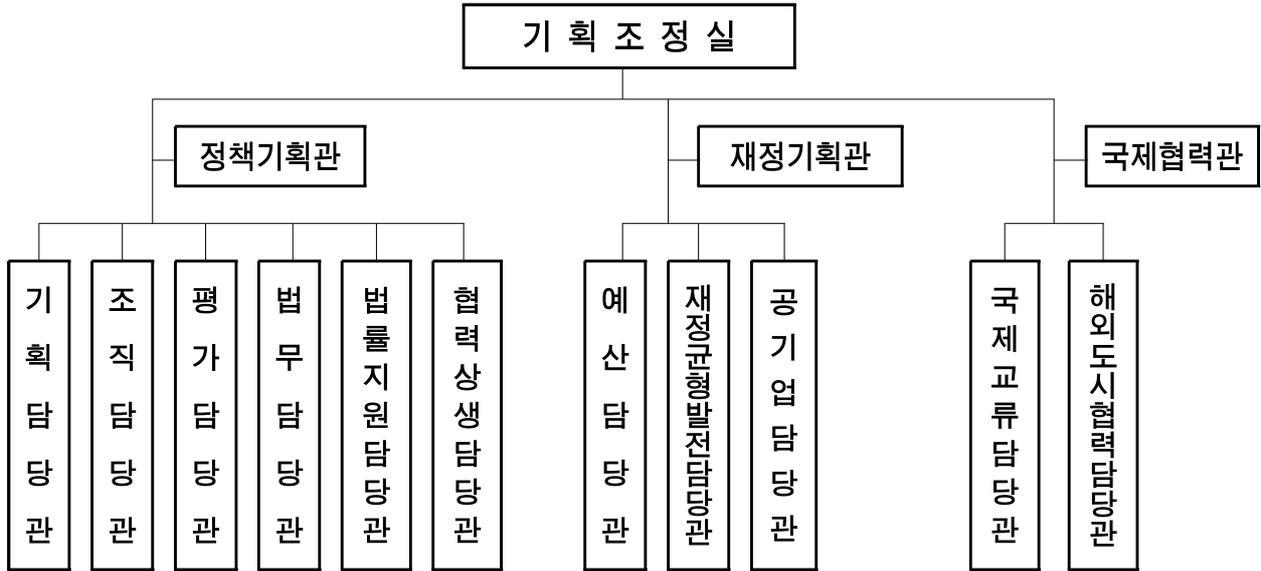
# 주요 업무 보고

2020. 9.

기획조정실

# I. 일반 현황

**조 직** 1실, 3관, 11담당관, 51팀, 1직속기관 · 1출연기관



-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8대학 10대학원 6처)
-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8실 2센터)

**인 력** 307/295명(정원/현원)

(’20. 8. 28. 현재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	별정직	관리운영직
계	307/295 (178)	257 / 249	42 / 38	1 / 1	7 / 7
기 획 담 당 관	39/42 (19)	31 / 34	6 / 6		2 / 2
조 직 담 당 관	35/33 (20)	34 / 33	/		1 /
평 가 담 당 관	33/29 (19)	31 / 28	1 / 1		1 /
법 무 담 당 관	26/25 (17)	23 / 22	2 / 2		1 / 1
법률지원담당관	29/29 (23)	14 / 13	15 / 15		/ 1
협력상생담당관	17/15 (7)	14 / 14	3 / 1		/
예 산 담 당 관	40/39 (20)	38 / 37	1 / 1		1 / 1
재정균형발전담당관	25/24 (14)	24 / 23	1 / 1		
공 기 업 담 당 관	21/20 (10)	19 / 18	2 / 2		
국 제 교 류 담 당 관	26/24 (17)	16 / 15	8 / 7	1 / 1	1 / 1
해외도시협력담당관	16/15 (12)	13 / 12	3 / 2		1

※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

## 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기 획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업무계획 수립, 시정현안사항 기획·조정</li> <li>○ 시의회 관련 업무, 국정감사 수감총괄, 공약총괄 관리 등</li> <li>○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</li> </ul>
조 직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, 민간위탁 업무</li> <li>○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</li> </ul>
평 가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정 주요사업·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</li> <li>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</li> <li>○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(부통제관)</li> </ul>
법 무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, 납세자 보호업무</li> <li>○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</li> </ul>
법률지원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 소송 수행, 법률자문, 계약서, 위·수탁 협약서 심사</li> <li>○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</li> </ul>
협력상생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,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</li> <li>○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국회·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</li> </ul>
예 산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, 예산집행 관리 총괄</li> <li>○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, 재정투융자기금 운용</li> <li>○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</li> </ul>
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市·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, 균형발전 총괄, 기금운용 총괄</li> <li>○ 재정투자심사, 지방보조금·국고보조금 총괄 등</li> </ul>
공 기 업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·출연기관 설립·지원, 경영평가, 재정모니터링</li> <li>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</li> </ul>
국제교류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외교 계획 수립,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</li> <li>○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·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</li> <li>○ 코로나19 관련 국제 도시간 교류·협력</li> </ul>
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·지원 총괄</li> <li>○ 국제기구 유치·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</li> </ul>

**예산** 총 규모 : 2조 9,123억원

○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9년 최종(사업수)	2020년(사업수)	증감
합계	3,654,786 (80)	2,912,334 (76)	-742,452
일반회계	1,247,406 (59)	984,549 (58)	-262,857
특별회계	93,546 (-)	6,511 (-)	-87,035
기금	2,313,834 (21)	1,921,274 (18)	-392,560

○ 일반회계 : 총 9,845억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9년 최종(사업수)	2020년(사업수)	증감
합계	1,247,406 (59)	984,549 (58)	-262,857
기획담당관	1,152 (3)	1,090 (2)	-62
조직담당관	87,315 (11)	102,061 (12)	14,746
평가담당관	1,948 (5)	2,424 (5)	476
법무담당관	778 (3)	723 (3)	-55
법률지원담당관	5,732 (2)	6,099 (2)	367
협력상생담당관	3,386 (3)	3,976 (3)	590
예산담당관	289,587 (3)	279,221 (3)	-10,366
재정균형발전담당관	844,837 (11)	576,934 (10)	-267,903
공기업담당관	814 (4)	895 (4)	81
국제교류담당관	5,995 (7)	5,646 (7)	-349
해외도시협력담당관	5,862 (7)	5,480 (7)	-382

○ 특별회계 : 총 65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9년 최종(사업수)	2020년(사업수)	증감
예산담당관	93,546 (-)	6,511 (-)	-87,035

○ 기금 : 총 1조 9,212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9년 최종(사업수)	2020년 계획(사업수)	증감
합계	2,313,834 (21)	1,921,274 (18)	-392,560
재정투융자기금	1,050,470 (-)	1,116,543 (-)	66,073
감채기금	1,248,062 (-)	788,314 (-)	-459,748
대외협력기금	14,231 (21)	15,242 (18)	1,011
지역개발기금	1,071 (-)	1,175 (-)	104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## II. 정책 목표

내 삶이 행복한 서울, 시민이 주인인 서울

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

민선 7기  
시정성과  
창출  
적극지원

시민권익  
향상을 위한  
지속적  
제도개선

효율적인  
예산·재정  
관리체계  
확립

대내외  
교류협력  
강화로  
도시위상 제고

# Ⅲ.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

## 1.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

-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
- ②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
- ③ 자치경찰제 입법 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
- ④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'지방자치법'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
- 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
- ⑥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
- ⑦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

## 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

- 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·제도개선 추진
- ②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
- ③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
- ④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

## 3.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- ①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
- ②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
- ③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
- ④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- ⑤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'코로나19' 대응상황 보고
- ⑥ '20년('19년 실적)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
- ⑦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

## 4.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

- 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
- ② 서울-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
- ③ 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
- ④ '외국인 명예시민' 선정 및 운영
- ⑤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
- ⑥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
- ⑦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
- ⑧ 국제기구 교류·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
- ⑨ 서울-과야칼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체결·웨비나 개최

# 1.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

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

②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

③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

④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'지방자치법'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

⑤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제도 운영 개선

⑥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

⑦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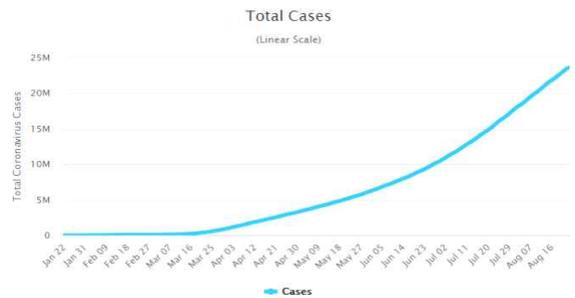
#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

전 세계에서 대유행(Pandemic)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

## □ 발생 현황

○ (전세계) 8. 26. 0시 현재(한국시간), 23,751,919명 확진, 815,797명 사망

-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의 확산세는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되었으나, 2월말 한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에서 환자 급증하면서 WHO 팬데믹 선언(3.11)



〈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추이〉

-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미주, 유럽

중동, 동남아,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확진환자와 사망자 증가추세 지속

○ (국 내) 1.20. 첫 확진환자 이후 해외 유입 등에 의해 소규모로 확산되다

- 2월말~3월, 일부 집단(교회, 병원 등)감염이 이어지며 확진자가 급증, 5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(이태원 클럽, 물류센터 등) 발생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

○ (서울시) 최근 광복절 전후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서울 확진자가 대폭 증가\*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

\*(8.13) 32명 → (8.14) 74명 → (8.15) 146명 → (8.16) 90명 → (8.17) 132명 → (8.18) 151명 → (8.19) 135명 → (8.20) 126명 → (8.21) 128명 → (8.22) 140명 → (8.23) 97명 → (8.24) 134명 → (8.25) 112명

## □ 우리시 대응 방향

- (거리두기)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
- (집단감염 대응) 클러스터별 명단 확보, 검사 명령 등 상황별 대응
- (역량강화) 선별진료소 및 검사, 중증·경증 치료 등 市 대응역량 강화

## □ 분야별 조치 현황

### 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

- (시행)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건을 넘으면서, 8. 16.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시행 개시

〈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〉

사회적 거리두기					
구분	1단계(생활 속 거리두기)		2단계	3단계	
목표	일상적·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		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	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및 방역망 통제력 회복	
핵심 메시지	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		불요불급한 외출·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	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	
조치	집합·모임·행사	허용 * 방역수칙 준수 권고	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금지	10인 이상 금지	
	스포츠행사	참석 관중 수 제한	무관중 경기	경기 중지	
	다중시설	공공	운영 허용 * 필요 시 일부 중단·제한	운영 중단	운영 중단
		민간	운영 허용 * 단,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(방역수칙 준수)	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(4㎡당(약1평)당 인원 제한)	고·중위험시설 운영 중단,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(예: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)
	학교, 유치원 어린이집	등교·원격 수업	등교·원격 수업 (등교인원 축소)	원격 수업 또는 휴업	
	기관, 기업	공공	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(예: 전 인원의 1/3)	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(예: 전 인원의 1/2)	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
		민간	유연·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	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	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

※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

○ **(주요내용) 시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**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다중이용시설** **집합금지** 등을 비롯한 2단계 조치 전면 시행으로 방역위기 적극 대응**

- (집합·모임·행사 금지)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(집합금지 행정명령)

⇒ (강화) 신고된 집회 개최 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 통한 감염 차단  
(2020. 8. 21.(금) 0시 ~ 8. 30.(일) 24시)

- (집합금지 및 집합제한)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시설 집합금지 및 이외 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(집합제한) 시행

〈집합금지명령 적용 시설 12종〉

-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 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 등

〈방역수칙준수(집합제한)명령 적용 시설 12종〉

- 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공연장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 등

⇒ (강화) **집합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시 즉시 집합금지, 고발 등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**

- (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단) 공공기관 운영 “실내” “국공립시설” 운영 중단

- ▶ 단,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·휴원 권고,  
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- (공공기관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마련 및 배포

- ▶ 유연, 재택근무(부서별 1/2 이상 의무화),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4부제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 완화. 회식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권장

○ **(마스크 의무착용) 실내 및 집회·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**마스크 착용 의무화\*** 행정명령 시행(8. 24.~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)**

\* 단,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따라 10.13.부터 추진 가능

## ② 집단감염 발생원인별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세 저지 노력

### 성북구 사랑제일교회

#### <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현황 >

- (방문자 현황(8.7.~8.13)) 총 4,066명(서울시 1,971, 주소불명 669, 타시도 1,426)
  - 서울시 및 주소불명 검사대상자에 대해 검사독려 중(서울시, 자치구 합동)
  - 주소불명 669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소 및 신원 파악 협조요청(8.17)
- (확진자 현황) 서울시 총 544명 확진 ※ 8.26.(수) 0시 기준
  - 검사 총 2,223명 (양성 543, 음성 1,667, 검사중 13) ※ 최초 확진자 제외

#### < 조치사항 >

- (고발조치)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, 성명불상자 고발
  - (고발개요) 8.16.(일) 19:25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(서울 종로구 소재)
  - (고발사유) 자가격리 위반,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, 보석조건 위반 등
- (추가 명단확보) 행정조사 통해 8.1.~8.13. 중 방문자 명단 추가확보
  - (조사개요) 8.16.(일) 14:00~15:30 / 문화정책과장 외 5명
  - (조치사항) 검사대상 신속한 전수조사 강조 및 협조요청, 미이행자 강제검사 통보
- (역학조사) 정확한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원본자료 확보를 위한 서울시-중대본 합동조사
  - (조사개요) 8.20.(목) 17:00 ~ / 성북구 사랑제일교회
  - (추진근거) 감염병 예방법 제18조(역학조사) 및 제42조(강제처분) 등
  - (조사반) 총 40명
    - ▶ 서울시(29), 중수본(2), 방대본(2), 서울시경(3), 성북구(2), 경기도(2)
  -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유 고발(8. 20. 서울시경)
    - ▶ 고발취지 : 감염병관리법 제18조 위반(역학조사 거부·방해)
  - 신도, 교회방문자, 숙식자 명단 등 확보 및 분석 통해 추가검사 대상자 파악

## 8.15. 광화문 집회

### < 8. 15.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>

○ (확진자 현황) 서울시 총 46명 확진 ※ 8.26.(수) 0시 기준

– 검사 총 7,628명 (양성 46, 음성 7,470, 검사중 112)

확진일 확진수	8.16	8.18	8.19	8.20	8.21.	8.22	8.23	8.24	8.25	비 고
46	1	1	6	15	8	4	6	2	3	- 집회 참석자: 29 - 집회 통제요원(경찰 등): 6 - 참석자의 접촉자(가족 등): 11

### < 조치사항 >

○ (협조요청) 8월 15일 집회신고 한 33개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안내

– 집회 참석한 소속 단체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안내(8.17)

– 집회 참여 단체원의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인적사항 제출 요청(8.19)

#### < 광복절 집회 대응 >

▶ 집회 규모 : 일파만파(11,000명), 광화문광장 주변(4,500명), 국투본(3,000명) 등 다수단체 2만여명

※ 집회신고 : 33개 단체 228,240명

▶ 주요 대응 : 집회취소촉구 브리핑(4회)→ 집회금지 통보(취소요청 포함 54회)→ 현장점검 및 채증(82명 근무)

▶ 집회 형태 :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된 2개 단체(3,100명)의 집회장소에서 다른 단체원 및 일반시민들 합류로 대규모(21,000명) 집회로 확대됨

○ (진단검사명령)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근 체류자까지 코로나 노출 가능성이 있어, 추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(8.24)

○ (전수조사 등)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응답사례별 대응(모니터링, 검사안내 등)

– (검사에정자) 8. 26.까지 실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철저

– (미응답자) 경찰과 협조하여 소재지 파악 및 방문조사 등 전수조사 실시

– (검사거부자) 벌칙규정(감염병예방법 제79조) 등 행정명령 준수 요청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익명검사 도입 등으로 검사율 제고

### 3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로 검사, 중증·경증 치료 등 총력 대응

####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

##### 〈 병상 확보 〉

- (공동대응)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('20.8.16.~)으로 환자 급증에 대응

##### 〈 병상 현황 〉

(기준:8.25. 20시, 단위:개)

구 분	보유병상		사용 중 병상				입원가능 병상	
	감염병 전담병원	중증환자 치료병상	감염병 전담병원	가동률(%)	중증환자 치료병상*	가동률(%)	감염병 전담병원	중증환자 치료병상**
합 계	1,705	319	1,280	75.1	227	71.2	425	19
서 울	771	199	630	81.7	126	63.3	141	11
인 천	400	49	140	35.0	40	81.6	260	3
경 기	534	71	510	95.5	61	85.9	24	5

\*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 병상 수는 코로나 환자만이 아닌 일반 중증환자를 포함한 수치

\*\*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입원가능 병상은 일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제외한 확진자 입원 가능 병상수  
(보유병상 - 사용 중 병상 - 확진자 입원가능병상 = 일반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)

- (추가확보)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·적극적인 병상 확보 및 효율적 운영
  - (일반병상) 북부병원76병상, 적십자병원94병상(코로나19 전담병원지정추진)
    - ▶ 현 입원환자 이송 후 운영 (9.7경)
  - (중환자병상) 중등도 환자 병실 전환 및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
    - ▶ 상급종합병원 등에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 요청(재난의료협의체 운영)
- (민관협력) 병상확보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『재난의료협의체』 운영
  - (목 적) 인력, 병상 등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
  - (구 성) 서울대학교 병원장, 재난거점병원장, 중증응급진료장 등 15인 이내
  - (역 할) 대량 환자발생에 따른 필수자원 수요 파악 및 병상, 인력 등 지원

##### 〈 생활치료센터 〉

- (현황) 남산유스호스텔(기준), 태릉선수촌(8.19. 개원), 은평소방학교(8.25. 개원), 등 총 765병상 운영 중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긴급하게 병상 확보중
- (추가확보) 국립국제교육원, KOICA 연수원 등 8월 말 개원을 통해 추가 병상 확보(466병상) 예정이며 기타 시설에 대해 추가 검토 중

## 선별진료소

- (운영지원) 기존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운영 지원
  - (시설지원) 글로브월형태 검체채취 부스, 냉방시설 등 추가 지원
  - (비용지원) 인건비, 방역물품 등 구매비, 종사인력 격려 위한 비용 지원
- (워킹스루) 지역 순회형 “찾아가는 선별진료소(Walking-Thru)” 운영
  -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자치구 대상 순회형 선별진료소를 시에서 직접 설치·운영

### 〈 운영 개요 〉

- ▶ (운영기간) 8월말부터 한달 간 ※ 태풍 ‘바비’ 통과 이후 운영 예정
- ▶ (장 소) 검사수요가 급증한 자치구와 협의 후 선정
- ▶ (설치개수) 이동형 검체채취부스(글로브월 형태) 6개
- ▶ (운영방식) 자치구 당 약 3일간 긴급 수요 처리 후 타 자치구로 이동
  - ※ 지역별 검사수요에 따라 6개 부스를 배분하여 여러 자치구 동시 설치·운영 가능

- (드라이브스루) 광역형 “드라이브 스루(Drive-Thru)식 선별진료소” 설치·운영
  - 市 전역에 걸친 검사수요 발생으로 지역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,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‘광역형 이동식 선별진료소(DT)’ 설치 예정

### 〈 운영 개요 〉

- ▶ (운영기간) 시 전역 검사수요 발생 즉시 ~ 필요시
- ▶ (장 소)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방역상 안전성이 높은 위치 중 선정
  - 상황의 엄중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확충 여부 결정 및 운영

## □ 향후 계획

- 코로나19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실·본부·국 총력 대응 : ~ 종식시
  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등 대응단계 격상, 완화 등 대처
- 포스트코로나 대비 시정운영 전략적 계획 마련 및 추진 : 상시

## 2

#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

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고 긴급현안에 대응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안정적 시정운영과 시민생활 안정 도모

### □ 추진 방향

- **현안발생시**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으로 **대응체계 구축**
-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**부서간 칸막이 해소** 및 소통·협력 지원
- **권한대행 체제 확립**으로 민선7기 시정 완수 및 시민생활 안정 도모

◇ 서울시 권한대행 체제 운영기간 : 272일간

▶ 故 박원순 시장 유고일(7. 10.(금))로부터 보궐선거일(4. 7(수), 24:00)까지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 운영으로 **시민 복지·안전 등 시민생활 보호** 추진
  - 권한대행, 부서장, 실·본부·국장 간 현안 공유로 촘촘한 시민보호 활성화
  - 풍수해 등 재난대비 취약 시설 등 현장방문으로 안전대비책 체감도 제고
    - ※ 신월 저수배류지 등 풍수해 대비시설 및 대규모 공사 현장 안전점검 철저 등
- **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**을 위한 **컨트롤타워 기능 수행**
  -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
  - 조직·예산·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
    - ※ 시장 유고,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회의 개최를 통한 적시 대응
- **실·본부·국간 정책 조정**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**실·본부·국의 협치** 지원
  - 정례·수시 회의체(실·본부·국장회의 등) 운영으로 부서간 소통·협업 유도
  - 소관 불분명 업무는 **총괄 및 협조 등 담당부서 지정**으로 명확한 역할분담
    - ※ 부동산대책, 코로나19 대응 등 시 정책안건에 대한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업

### [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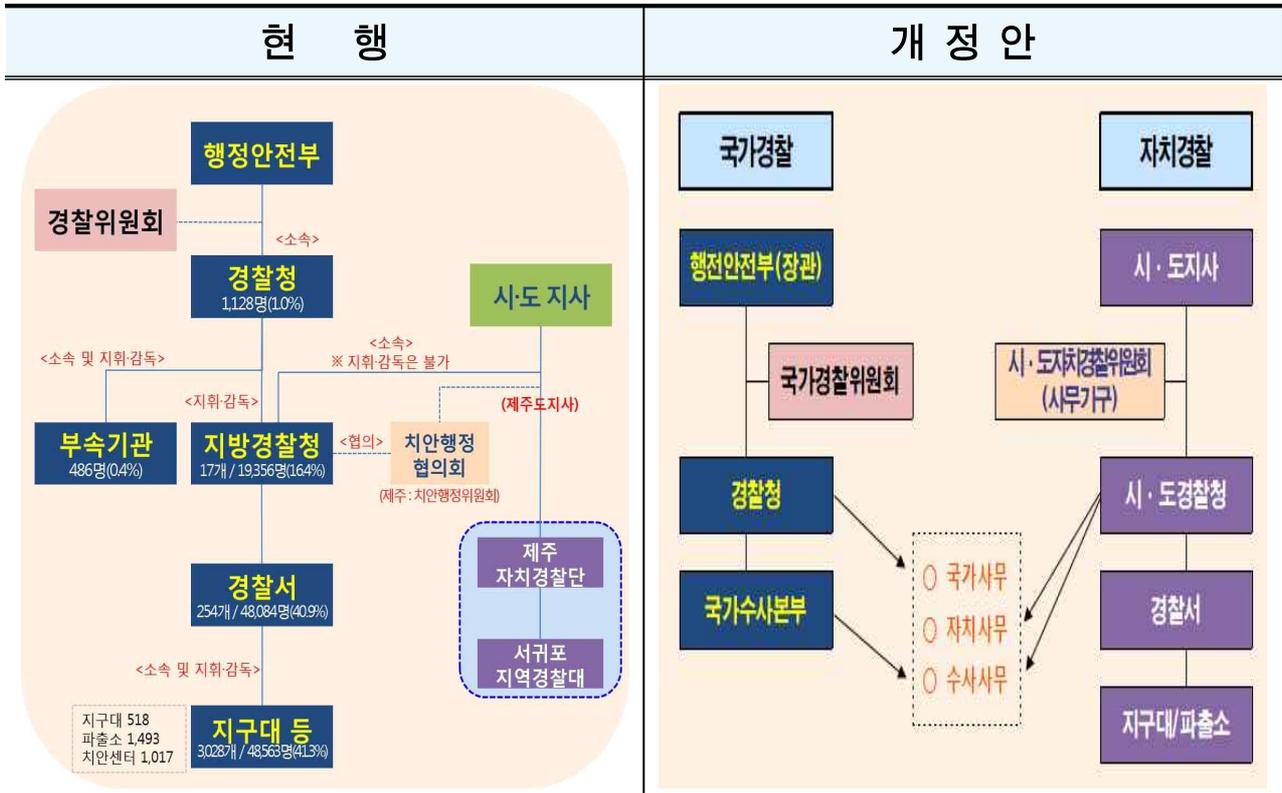
긴 급	상 시	중장기
긴급 현안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	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	권한대행 체제 시민생활 근간 보호

### 3

##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

제 21대 국회에 자치경찰 관련법안(경찰법, 경찰공무원법)이 발의(20.8.4)됨에 따라 정부, 국회 등 협의를 통해 시 입장을 적극 반영 추진

- 발의법안 주요내용**(김영배 의원 대표발의, 더불어민주당)
  - (조 직) ‘시·도자치경찰위원회’ 설치, 지방경찰청 시도지사 소속
  - (사 무) 경찰사무를 ‘국가·수사·자치’ 사무로 구분 및 각 상위원청이 지휘
  - (인 사) 경찰신분은 국가직 유지, 임용권은 대통령·경찰청장에게 부여
    -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임용권 일부 시·도지사에게 위임
  - (재 정)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·장비 등 비용 국가 지원
  - (시행일) 2021. 1. 1.(금) 시행
  
- 시 대응방안**
  -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학계,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·검토
    - 자치경찰제 관련 토론회·세미나 참석,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
  - 발의된 법안상 보완과제를 검토하여 의견제출 및 수정안 제시
    - 자치경찰 사무·인사권, 예산지원, 통제수단, 준비기간 등
  
- 추진 계획**
  - (법안내용 건의) 자치경찰사무·인사권 및 비용보장, 시의회 감시권 등 건의
    -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자치경찰사무, 인사권한 등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
    -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적 통제기관인 시의회 감시권 명문화 요청
    -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제시 요청 등
    - 일선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지휘통제 역할수행, ‘경찰부(副)서장제’ 필요 등
  - (사전 준비사항)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요청 및 추진전담조직
    - 성공적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요청(2021.1월 ⇒ 2021.7월 이후)
    - 자치경찰위원회(사무기구) 구성, 자치법규 마련, 비용협의 등 추진전담조직 설치



- **조직** : 지방경찰청 이하 소속기관 시·도 소속으로 변경(시도경찰청, 경찰서, 지구대/파출소), 시·도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
  - 경찰청 이하 관청은 소속만 시·도로 변경 후 국가/수사/자치경찰 사무 수행
- **인사** : 신분은 국가직 유지, 임용권은 대통령(총경 이상)/경찰청장(경정 이하)
  - 단, 경정 이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경찰청장→시·도지사에게 위임 가능
  -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 추천, 대통령 임용
- **사무** : 현재의 경찰사무를 '국가경찰-수사경찰-자치경찰' 사무로 분리
  -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,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, 자치경찰사무\*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·감독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
  - \* 지역 내 생활안전, 교통, 지역경비 사무 및 교통/학교·가정·성폭력 등 수사사무
- **시·도자치경찰위원회** :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·도경찰청장 직접 지휘·감독
  - 구성(7) : 시·도지사 지명(1) + 시·도의회 추천(2) +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(2) + 국가경찰위원회 추천(2) ※ 위원장(1)·상임위원(1), 시·도지사 임명
- **재정** : 이관된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·장비 등 비용 국가지원 명시
  -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·도지사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수립

## 4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'지방자치법'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

제 21대 국회에 발의(7.3)된 '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'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

### □ '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(정부안)' 주요내용

- **지자체 조직권** : 부단체장 증원(3명 → 5명), 실국본부(18개 → 21개)
  - 부단체장과 실·국·본부 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
- **주민참여 확대** : '주민자치회' 명문화, 주민감사청구 완화(500명→300명)
  -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'주민자치회' 도입 근거 마련
- **협력관계 확립**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모 '중앙지방협력회의' 운영
  - ※ 후속 법률(중앙·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법률안) 국회 발의(7.3)
- **시의회 권한확대** :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, 전문위원 수 확대(+1명),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마련(대통령령 위임) 등

※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인당 1명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적용 검토

### □ 추진 실적

- 지방 4대 협의체 연대 입법 촉구 및 개별 국회의원 방문·설명 : '20.2월 ~
- 자치분권위원장, 시장권한대행 지방분권관련 입법 협력 합의 : '20.8.24.
- 자치분권위 주관, 자치분권 주요법안 관련 시·도 영상회의 : '20.8.25.

### □ 향후 대응계획

-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**지속적 의견제출**
  - 시의회(지방분권 TF), 시도지사협의회, 지방4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
  - 국회 행안위 소속 개별 국회의원 방문·설명(계속)
- 9월 정기국회 대비, **입법동향 지속 모니터링**
  - 부단체장 증원,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주요입법과제 심의진행 모니터링
- 법안 통과시, 시의회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마련 등 **후속조치 추진**
  - 의회인사권 독립,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시행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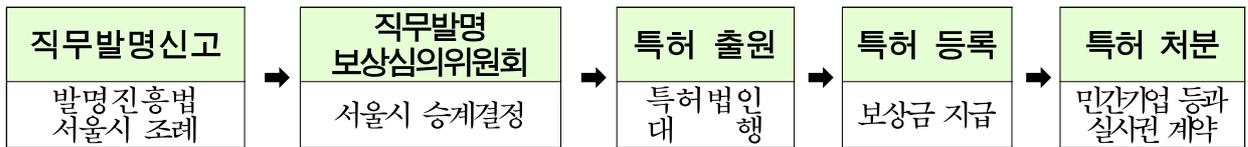
## 5

#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

우리시 직무발명 공무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시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선방안 마련

### □ 사업 개요

- **근 거** : 발명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- **대 상** :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
- **절 차** :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보상



### ○ 보상내용

- 등록보상금 : 특허권 100만원, 실용신안권 50만원, 디자인권 30만원
- 처분보상금 : 특허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100분의 50

### □ 추진 실적

-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및 특허 권리 15건 승계 : '20.5월
- 시유 특허 9건 증가에 따른 등록보상금 900만원 지급 : ~'20.8월
- 지식재산권 실시 계약 14건 체결 및 실시료 1,836만원 징수: ~'20.8월

### □ 추진 계획

- **조례 개정을 통한 등록보상금 지급 규모 상향**
  -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 각 200/100/6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0% 인상
  - ※ 기타 인사상 특전은 금전적 보상과의 중복,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별도 신설 없이 법령상 '우수제안자' '행정의 달인'등에게 부여되는 특전을 활용토록 권고
- **대내·외 홍보 및 교류·협력 강화**
  - 지식재산권 처분 공고 확대,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, 발명진흥회 연계 사업 추진 등

### □ 향후 일정
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 일부 개정안 상정 : '20.12월
- 홍보 및 교류·협력 강화 관련 사업 추진 : '21.1월~

## 6

#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

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'20년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여 '21년 평가에 대비

### □ 개 요

- **근 거**: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1조(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)
- **평가대상**: 국가위임사무, 국고보조사무, 국가주요시책
- **평가지기**: 매년 1~ 6월(실적기준: 전년도 1~12월)
- **평가분야**: 5대 국정목표 122개 지표 \* 서울시 해당지표: 115개(정성 34, 정량 81)
- **평가방법**: [정성] 우수사례, [정량] 목표달성도 구분, 시부·도부 별도 평가
- **소요예산**: 991,000천원 \* 예산사업명 :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)

### □ '20년 평가결과

- (정성) 시부 우수사례 35개 중 **서울 11개 선정** ※ 우수 시 선정
  -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, 소상공인(자영업자) 정책 우수사례 등
- (정량) 달성도 69% : 81개 지표중 56개 달성, 25개 미달성
  - \* '18년까지 가나다등급 부여, '19년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여 시도별 목표 달성여부만 평가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(정성) 우수사례 미선정 지표\*에 대해 행안부 **컨설팅 의뢰하여 개선 방안 마련**
  - \* 미선정 지표 :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,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
- (정량) 대도시 특성상 **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곤란한 지표 개선 추진**
  - \*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의 경우 병원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는 추적조사가 어려운 등 불리
- 정량지표 분기별 실적점검, 정성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등 선제적 관리

### □ 향후 일정

- '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·구 지표담당자 워크숍 : '20.10월
-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지속요구(→정부) : 수 시
- 시·구 우수기관·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: ~'20.11월
-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정기 토론회 개최 : 격 월

## 7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

‘지속가능발전’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도모함

### □ 추진 배경

- UN, 지속가능발전 담론 발표('15.9월)를 통해 전 세계에 이행수단 마련 촉구
- 경제·사회·환경의 미래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市の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 필요
  - ※ 지속가능발전 : ‘경제의 발전’, ‘사회의 안정과 통합’, ‘환경의 보전’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

### □ 그간 추진성과

- 제1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(기본계획: '15~'19년 / 이행계획: '17~'19년)
  - 4대 목표, 15대 전략, 35개 과제, 328개 세부사업, 405개 성과지표 설정·관리
-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('13년~)
- 시민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('16년~)

### □ 향후 추진계획

〈 제2차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(계획기간: '20~'24년 / '20.9월 중 수립예정) 〉

-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7대 목표 및 96개 세부과제 도출
  - 제1차 계획과의 차이 : 유사사업 통합(328개→108개) 등을 통해 관리의 용이성 제고
  - ※ 제1차 계획의 경우 세부사업 간 중복 및 세부사업 수 과다로 인해 관리에 애로 발생
-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별 취약지표를 대상으로 역점 개선과제 마련
  - ※ 취약지표 : (경제) 사회적경제 기업 수 / (사회) 평생교육 참여율 / (환경) 신재생에너지 비율

〈지속가능발전위원회·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공유〉

-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, 제2차 기본계획 본격 시행
  - ※ (임기) '20.2월~'22.2월 / (위원수) 36명 / (기능)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 등
-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('20.11월)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발표

## 2.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

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·제도개선 추진

---

②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

---

③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

---

④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

---

# 1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·제도개선 추진

코로나19 대응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·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·추진

## □ 추진 방향
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·제도상 미비점 정비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·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중점 발굴
- 자치법규(조례·규칙)상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

## □ 중점 추진내용

### ① 감염병 적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·제도개선 추진

-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**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**
  - 실무부서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정부·국회 건의('20. 5~6월)
  - 우리시 건의내용을 일부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공포 및 시행('20. 8. 12.)

《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('20. 8. 12.) 》

구 분	내 용
지역사회 전파 사전차단 (우리시 건의내용 포함)	■ 감염 위험 장소·시설 관리자,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하고, 위반시 과태료 부과
방역시설 대응력 제고	■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고, 전원 등 조치 거부시 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 ■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, 연수원·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

- 김원이 의원 발의안(우리시 개정안 반영) 등 국회 계류 중 안건(총 37건)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및 협의 지속
- **지역경제 활성화, 민생혁신을 위한 법령·제도개선 과제 발굴·건의**
  - (행안부) 지역개발, 도시재생 등 규제개혁과제 65건 건의, 25건 선정('20. 상반기)
  - (국 회) 코로나19 대응, 도시정비 등 법령제도개선 중점과제 발굴·건의('20. 9월)

## ② 자치법규 불합리 등록규제 일제정비

- 정비대상 : 市 조례·규칙 등록규제 129건
    - 등록규제 총 412건 중 '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 우선 정비
      - ※ 등록규제 :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·관리하는 조례·규칙상 규제
  -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
- 정비대상 통보  
(법무담당관)

➔

검토의견 제출  
(소관부서)

➔

규제 존치여부 검토  
(법무담당관)

➔

최종 규제심사  
(市규제개혁위원회)  
※ 검토의견 불일치 시
- 정비대상 등록규제 존치여부 소관부서 및 법무담당관 검토 실시('20. 상반기)
    - 정비결과 : 등록규제 제외 25건, 규제존치 102건, 최종 규제심사 대상 2건
      - ※ 등록규제 제외 :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변경 등으로 현재에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
  -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규제심사 대상 2건 심의('20. 9월 규제위 개최)

## ③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

- 「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」 개최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
  - 공모기간 : 2020. 9. 1.(화) ~ 9. 25.(금)(4주간)
  - 공모대상 : 시민복지, 생활불편, 시민안전, 민생경제, 혁신성장 등 5개 분야
  - 동주민센터 포스터 부착, 전광판 표출, 시·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진행

### 2019년 수상작 주요 개선사례

- '19년도 최우수상 : 「퍼스널 모빌리티」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
  - 도로교통법 개정 시 반영('20. 12. 10. 시행)
  - 개정내용 : 도로교통법상 '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'를 새롭게 정의하고,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
-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 요청을 위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개편
  - 시민·기업이 직접 규제의 존치여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市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내 별도 창구 마련('20. 9월)

## □ 향후 일정

-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심사 : '20. 9~11월
- 법령·제도개선 제안집(「바꾸어요, 희망으로」) 제작·배포 : '20. 10~12월

## 2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

### 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행정심판위원회 운영('20년도 예산: 294백만원)
- 심판위원 : 정원 50명/현원 42명(외부 37명, 내부 5명)
- 회의운영 : 연간 24회 개최(매월 2회) ※ '20년 : 총 27회 개최 예정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심판사건 집중처리(6~8월) 성공적 실시
  - 시민생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처리건수 확대를 통한 재결기간 단축 노력
  - 집중처리 기간 중 민생사건 포함 총 617건 처리

건수 \ 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처리건수	128건	133건	154건	171건	177건	210건	220건	187건
기간별 월 평균	152.6건					205.7건		

※ 직전기간(20. 1~5월) 대비 월 평균 처리건수 53.1건 증가

- 집중처리 기간 중 행정심판위원회 증회 운영(총 9회 실시, 월 2회 → 3회)
  - 행정심판사건의 신속 상정을 위해 매월 수시 1회 추가 개최
- 신속한 처리와 함께,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한 주·부심제 적극 활용
  - 주·부심 지정현황(회당): 18.8건('18) → 21.9건('19) → 24.4건('20.6~8월)

### □ 향후 일정

-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레집 제작·배포 : '20.11월
  - 분야별 재결레 선정(9월), 개인정보 삭제 등 보안작업(10월), 책자 제작·배포(11월)

### 3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

소송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및 송무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·체계적 소송수행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

#### □ 추진 방향

##### ○ 법률전문관(변호사)의 소송 대응으로 전문성 강화

- 서울시 소속 변호사(9명)가 소송을 직접수행하여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
- 소장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법률전문관이 소송을 전담하여 전문적인 대응 가능

##### ○ 전문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예산절감 추진

\* 외부변호사 선임 강행규정이 있거나 법률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외

#### □ 추진 실적

##### ○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: '20년 총 837건 수행

- 소송수행 현황

(단위: 건)

구 분	수 행 건 수			판 결 확 정					진 행
	계	이 월	신 소	계	승 소	승소율(%)	패 소	기타	
2020.7월	837	559	278	237	156	73.6	56	25	600

\* 승소는 소취하·화해·조정 등을 포함하며, 소가(訴價) 기준 50% 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

\*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, 기타 조정·이송 등

##### ○ 시정에 영향이 큰 중요소송 승소를 통한 예산절감

-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(소가 141억 중 10억 인용, 92.8% 일부승소) 승소
- 양재역 환승주차장 인도청구 사건(소가 34억 전부승소) 승소

##### ○ 소송 직접수행으로 예산절감: 신소 201건 직접수행

#### □ 향후 일정

##### ○ 송무업무(통합부서 소송 직접 수행, 비통합부서 소송 지원): 연중 상시 수행

## 4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

공익변호사 사업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
### □ 추진 방향

-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
- 모든 시민에게 상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로,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유도

### □ 공익변호사단 운영 실적

-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(1,147명)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

(’20. 7월말 기준)

구 분	시민법률상담실	마을변호사	이웃분쟁조정센터
목 적	전문 법조인의 대시민 법률상담서비스를 체계적·지속적으로 제공		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
장 소	서소문청사 1동 1층	25개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 424곳	서소문청사 1동 1층
운영방법	4명의 변호사가 방문하여 상담(매일)	동별 상담일에 변호사 방문상담(매월1~4회)	조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(수시)
활동인원	공익변호사 전원 (매월 공익변호사가 신청)	공익변호사 중 848명	공익변호사 중 16명
상담실적	2,520건 (월평균 360건)	8,385건 (월평균 1,197건)	72건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률서비스 제공방식 다양화
  - 방역절차 준수하여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방식 변경
-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
  - 시·구 영상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및 마을버스 등 오프라인 홍보

### □ 향후 일정

- 임기만료 공익변호사 재위촉 : ’20. 12월
  - 서울지방변호사회 협조를 통한 징계사실 조회 등
- 마을변호사 수시배정 등 마을변호사 활동 강화 : 연중 상시

### 3.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①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

②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

③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

④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
⑤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'코로나19' 대응상황 보고

⑥ '20년('19년 실적)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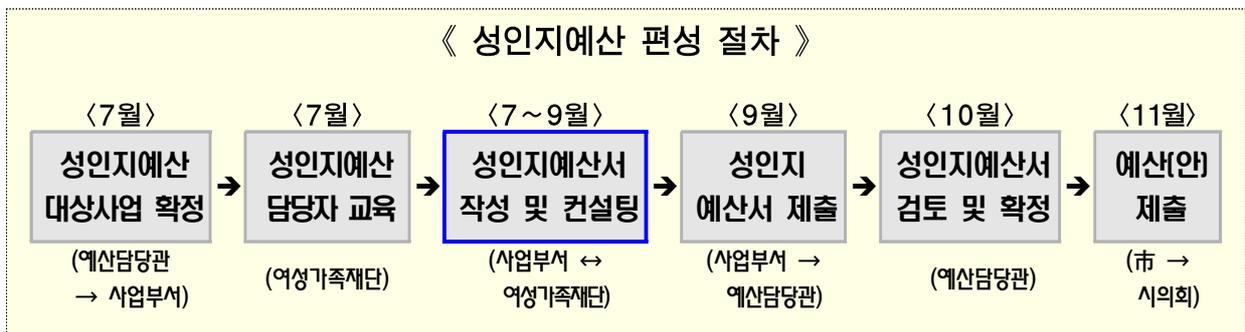
⑦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

# 1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

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를 확대하고 실무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

## □ 추진 방향

-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에 대한 분석체계 구축
-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컨설팅 확대 추진
- 사업부서 의견 적극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으로 실효성 제고



## □ 추진 실적

-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(7월)
  -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1개, 성별영향평가사업 51개, 자치단체 특화사업 23개 등 85개 신규사업 선정하고,
  -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, 전문가 자문회의 등 성평등 제고효과 분석하여 59개 사업 제외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 추진
  - '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총 359개 선정('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사업 333개)
    - ※ 추후 '21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상사업 수는 변동 가능
-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실시(7월)
  -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 교육(7.7, 7.9) 실시
  -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위해 성인지예산 컨설턴트와 면대면 상담 추진
  -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·배부

## □ 추진 계획

### ○ 성인지예산 편성 **전문 컨설팅 실시**(8~10월)

- 추진 방법 : 서면컨설팅 2~3회(유선컨설팅 수시 병행)
- 컨설팅내용 : 성별 수혜분석, 성별격차 원인분석, 성과목표·지표 설정 등 작성기준 자문 및 사업별 구체적인 컨설팅 제공

#### 〈분야별 컨설팅단 개요〉

- ◎ 구성 : 이화리더십개발원 여성학 전문가,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9명
- ◎ 분야 :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건축·안전, 보육·여성, 문화·교육

### ○ 성평등 체감도 강화 위한 **성인지예산서 수정·보완**(9~10월)

- 사업부서 : 실제 사업대상을 감안한 성별 사업수혜자 조정, 사업환경을 고려한 성평등 기대효과 작성 등 **성인지예산서 수정·보완**
- 예산담당관 : 재원별·성별 소요예산 검토,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, 성과목표 산출근거 확인 등 **성인지예산서 검증**

### ○ '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**성별영향평가위원회**에서 심의·확정(10월)

- 컨설팅을 통해 수정·보완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확정

## □ 향후 일정

-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(예산담당관) : '20. 11. 2.
- 서울시 성인지예·결산서 종합분석 연구(여성가족재단) : '20. 4.~12.  
※ 성인지예·결산 성과목표 관리체계 개발(여성가족재단) '21년 진행 예정

#### 《 서울시 성인지예·결산서 종합분석 개요 》

- ◎ 추진방향 :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 개선안 도출
- ◎ 추진내용
  -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운영체계 및 성인지예·결산 추진현황 분석
  -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적절성, 예산서 작성 효용성 분석
  - 담당 공무원, 전문가 면접조사 실시
- ◎ 기대효과 : 성인지예산서의 안정적 운영 및 성인지예·결산서 작성 내실화

## 2

#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

공공임대주택 확충, 도시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기 재원조달로 시정 핵심사업 성과 제고

### □ 발행 개요

#### ○ 발행대상

-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- 재해예방, 복구사업 및 지방채 차환
-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

#### ○ 발행규모 : 3조 6,164억원 ('19년 이월 3,187억원 포함)

- 임대주택 공급,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51개 사업 ※ 8월기준 1조 8,817억원발행

#### ○ 발행절차 : 온라인으로 발행 제안서 공고 후 금리 등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

### □ 발행 계획

#### ○ (발행시기) 사업공정률 및 자금 소요시기, 채권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 시기 조정

- 시 자금 수급 전망, 금리 추이 및 국고채 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기 발행

#### ○ (차 입 선) 발행금리 및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집공채, 금융채, 정부자금 등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

- 대부분 사업(48개 사업)에 대해 현재 금융채보다 금리가 낮은 모집공채로 발행하고 2개 사업은 정부자금 용자, 1개 사업은 매출공채(도철공채)

※ 금리(8.10 기준) : 모집공채 1.244%(5년물) / 금융채 2.02%

#### ○ (발행구간) 3년물/5년물(단기), 7년물/10년물(중장기) 등으로 구성

-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만기구조 분산
-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고채 주요 발행구간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

### □ 향후 일정

- 사업공정률·자금 소요시기 등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: ~'20.12월
- 상환계획 관리 및 채무현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: ~'20.12월

### 3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

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·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중앙·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

#### □ 추진 방향

-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재정조정으로 우리시 실질적 재정 확충
- 재정분권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시의회·국회, 학계 등과 소통·협력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추진동력 확보

#### □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(자치분권위원회)

##### 〈 기본 방향 〉

- (세수확충) 기능이양과 연계하여 지방세수 확충 규모를 설정
- (기능이양)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-지방 재정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
- (재정조정)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보정장치 마련

$$\rightarrow \text{지방재정 순증} = \text{지방세 확충} + \text{기초연금 국가이양} - \text{국고보조 지방이양}$$

(3.4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8.8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3.2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8.6조)

- (지방세 확충) 지방소비세율 10%p 인상 및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을 통해 총 8.8조원 확충
  - 부가가치세의 21%인 '지방소비세율'을 31%로 인상(8.5조원), 국세인 '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'를 레저세(0.3조원)로 전환

- (기능이양)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이양, 전국적·보편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이양하여 **중앙-지방 기능의 합리적 배분**
  - 기초연금사업은 국가로 이양(3.2조원), 영유아 보육료,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일부 국고보조사업(8.6조원)은 지방으로 이양 ⇒ 5.4조 지방재정부담
- (재정조정) 지방소비세 확충액(8.5조원) 중 일부(5.4조원)를 **지자체 기능이양에 따른 부담분(5.4조원)으로 총당 후 잔여액 3.1조원을 지역발전상생기금에 산입하여 시·도간 배분**

## □ 추진 계획

-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, 타 지자체와 협력·상생할 수 있는 **재정조정방안 건의**
  - 정부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부담(5.4조)의 한시적 보전 및 現 지방소비세의 시·도별 배분비중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배분(3.1조)
-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를 위해 **시의회·국회,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대응**
  - 연내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,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 지속
- 재정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과 협력, **재정분권 효과 언론홍보 추진**
  -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역할,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효과 등 중점 부각

## □ 향후 일정

- 기능이양 및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시도협·국회 건의 : '20.9월~
-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언론홍보 추진 : '20.9월~

## 4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

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·타당성·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

### □ 추진 방향

-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개선
- 투자심사위원회(정기·수시) 상설 운영으로 주요사업 신속 추진 지원

### □ 심사 개요

- 심사대상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
- 심사기준 : 사업의 필요성·시급성, 자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·분석
- 심사방법 :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(외부 12, 내부 3)
- 심사결과 : 적정, 조건부추진, 재검토, 부적정

### □ 추진 실적

- (제도개선)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: 2020. 7.
  -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 완화(40억원이상 → 300억원~500억원 미만) 등
- (제도개선) 市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간단축을 통해 주요사업 신속추진 지원
  - 정기 심사(총 3회, 3,5,7월) 외 수시 투자심사 확대 운영 (총 4회 2,4,5,6월)
- (위원회 운영) 市 투자심사 : 총 146건, 총사업비 141,669억원(총 7회 실시)
  - (심사결과) 적정 25건(17%), 조건부추진 64건(44%), 재검토 9건(6%), 반려 및 철회 48건(33%)
- (심사지원) 중앙투자심사 : 총 15건, 총사업비 6,030억원(총 2회 실시)
  - (심사결과) 조건부추진 10건(67%), 재검토 5건(33%)

### □ 향후 일정

- 하반기 정기 및 수시 市 투자심사 실시 (총 2회, 9,10월)

## 5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

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 
위한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대응상황 보고

### □ 추진 배경

- 투자·출연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 필요
-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시민 필수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관별로 비상조직 운영 및 사전 대응계획 수립 필요

### □ 대응 상황 (※ '20. 8월 말 기준)

- (필수기능 유지) 비상조직구성·대체인력배치 통해 유사상황 대비 철저
  - 기관별로 '비상상황반'을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 상황 신속전파, 접촉자 격리 및 코로나 검사실시, 시설물 폐쇄 등 필요조치 즉각 시행
  - 확진자 발생 시, 대체인력·대직자·재택근무자 등 투입가능 인력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침수립 안내
    - 필수기능 예시 : 지하철 운영,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안전 유지관리, 발전소관리, 의료시스템 운영, 코로나 콜센터 상담, 방송, 필수 행정업무 등
- (방역조치 강화) '사회적 거리두기' 2단계 격상 후,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신지침을 각 기관에 전파하여 방역활동 철저 독려
  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·모임 집합금지
  - 소속·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
  - 확진자 발생 시, 즉시 방역조치 시행 및 접촉자 코로나검사 실시 후 격리조치
- (복무지침 강화) 재택근무 확대·고위험시설 방문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안내
  - 유흥시설, PC방,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·이용 자제
  - 재택근무 시행, 외부인 대인접촉 최소화 권고,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

➡ 추후 '코로나19' 확산상황에 따라 적합지침 수립·전파 지속시행

## 6

# '20년('19년 실적) 투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

투자·출연기관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경영 합리화 및 시민 복리 증진 도모

### □ 투자기관 평가개요

#### 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

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에 대한 법정평가

- 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78조, 동법 시행령 제68조
- 평가대상 : 지방공사·공단·직영기업 249개(공사공단 150, 직영기업 99)
  - 서울시 : 교통공사, 시설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주택도시공사, 에너지공사
  - ※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, 도시개발, 특정공사·공단, 시설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
- 평가방법 :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 (행정안전부 주관)
- 평가시기 : '20. 4월~9월
- 평가지표 : 공통지표(70), 공기업별 특성지표(30)
  - 공통지표(70) : 리더십, 경영시스템, 고객만족성과, 일자리 확대, 사회적 책임
  - 공기업별 특성지표(30) : 주요사업, 경영효율성과
- 결과활용 : 평가등급(가~마) 부여 및 평가급 지급률 범위 결정
  - 기관장(0~400%), 임원(0~300%), 직원(0~200%, 자체평가급 100% 별도)

#### ② 서울시 핵심가치평가

시정철학 구현노력 등에 대한 市 자율평가

- 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78조
- 평가대상 : 교통공사, 시설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주택도시공사, 에너지공사
- 평가방법 : 서울시 직접 수행 ※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·운영
- 평가시기 : '20. 4월~10월
- 평가지표 : 운영성과(30), 재무성과(20), 사업성과(50)
- 결과활용 : 기관장·임원 평가 반영 및 직원 평가급 지급률 최종 결정
  - 기관장 평가(70%), 본부장 평가(40%), 감사 평가(20%)에 반영
  - 행정안전부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종 직원 평가급 지급률 결정

## □ 출연기관 평가개요

- **근 거**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
- **평가대상** :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
  - 서울의료원, 서울연구원, 산업진흥원, 신보, 세종, 여성가족, 복지, 문화, 시향, 디자인, 장학, 평생교육, 50플러스, 디지털, 120, 공공보건, 기술연구원, 관광재단, 서울시자원봉사센터
  - ※ 설립 1년 미만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: 사회서비스원, 미디어재단
- **평가방법** : 서울시 직접 수행 ※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·운영
- **평가지표** : '20. 4월~10월
- **평가지표** : 리더십·전략(15), 경영시스템(13), 사회적책임(22), 사업성과(50)
  - 리더십·전략(15) : 기관장 리더십(6), 전략기획(3), 정책준수(6)
  - 경영시스템(13) : 조직관리(2), 인사관리(4), 재무예산관리(7)
  - 사회적책임(22) :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(6), 윤리경영(7), 사회적 공헌활동(2), 재난·안전관리(3), 이해관계자 참여(4)
- **결과활용** : 기관장 평가 반영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
  - 기관장 평가 반영 : 경영평가(75%), 사업성과(15%), 직원만족도(10%)
  - 직원 성과급 지급률 : 평가등급(가~라)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(0~300%) 결정,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지급총액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등 지급

## □ 향후 일정

-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: '20. 9월 말
- 기관별 평가결과 확정·통보 : '20. 10월
  - ※ 행정안전부 주관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'20. 9월 중 결과 확정·통보 예정
- 최종 평가결과 제298회 정례회 보고 : '20. 11월

## 7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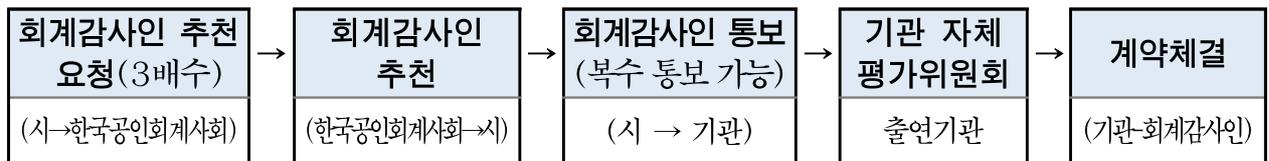
市 출연기관 회계감사 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<sup>1)</sup>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

### □ 추진 배경

- 출연기관 결산시 회계감사인 회계감사 규정 신설(출자출연법 제19조)
  - － 매년 2월 결산완료 후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 제출
-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의 공정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
  - － 기관별 자체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감사인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대상 기관 : 市 출연기관 등 21개 기관(자원봉사센터 포함)
  - 개선 내용 : 시 지침으로 회계감사인 지정 의무화 및 선정절차 객관성 확보
  - 회계감사인 선정 (※ 2020년 결산부터 적용)
    - － (市 소관부서)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 추천
    - － (출연기관) 시에서 지정한 회계감사인 중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및 계약
- ※ 선정절차



▶ 회계감사인 지정 후 계약기간 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한 절차 적용

### □ 향후 일정

- 회계감사인 추천요청 및 추천(市소관부서, 한국공인회계사회) : '20. 8월
- 회계감사인 지정 및 추천내역 통보(市소관부서) : '20. 9월
- 회계감사인 선정 및 계약 체결(출연기관) : '20. 9월

1)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'회계법인'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'감사반'을 말함

## 4.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

- ① **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**
- ② **서울-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**
- ③ **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**
- ④ **'입국인 명예시민' 선정 및 운영**
- ⑤ **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**
- ⑥ **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**
- ⑦ **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**
- ⑧ **국제기구 교류·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**
- ⑨ **서울-관아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·웨비나 개최**

# 1

##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

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, 지방분권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추진 도모

### 추진 방향

- 지자체간 공조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 등 위기 발생시 신속·효율적 대응 도모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실현

### 중점 추진내용
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광역적 대응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
  - 우리시 제안으로 개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확산(2월)
  -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 공조 체계 구축 및 캠페인 등 진행(3.3.~)
  - 코로나 안심구역 '클린존' 운영 등 우리시 우수 방역 사례 지자체간 공유
- 코로나, 수해 등 재난재해 발생 지역의 인도적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
  - 우한교민 격리시설 운영한 아산·진천·음성(2.5억원)과 대구·경북 지원(4억원)
  -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·충청·광주·전라 7개 지자체 이재민 지원(6억원)
  - 피해 지역 11번가 농·수산물 기획전 등으로 지역 농·수산물 판로 지원(1,245백만원 매출)
-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
  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 4대협의체 공동촉구문 발표(2월)
  - 우리시(안)을 기반으로 시·도 합의(안)을 반영한 '중앙-지방협력회의' 법률안 발의(7.3.)
  - 지역 공동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협 성명 발표(8월)

### 향후 계획

- 코로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·도간 공동 대응 : 상시

## 2

# 서울-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

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-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기반 조성 및 강화

### □ 추진 방향

- 코로나-19 상황임을 고려, 상생협력 관계 공고화 및 사업 내실화 추진
-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약사업 준비를 통해 교류의 지속가능성 제고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교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

#### 《 2020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현황 》

- 계룡시(5.11) :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협력, 청소년 역사·문화교류사업, 우수정책 교류 등 5개 사업
- 제주시(5.19) :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, 4·3의 전국화, 공연시설 사용 협조 등 5개 사업
- 김해시(5.22) : 복지분야 민·관 상호협력, 농산물 판매지원 등 5개 사업

※ 서울-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('20.8월 기준) : 총 67건(광역 13, 기초 54)

-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개선방안 수립 시행
  - 우호교류협력 협약갱신제 실시 통보(64개 지자체)

### □ 향후 계획

- 실행가능한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서울-지역간 상생협약관계 지속 유지
  - 협약갱신제(4년 주기) 시행을 통한 기존 협력사업의 고도화 및 신규사업 발굴
  - 협약체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가 발굴 및 교류지원
-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분석을 통한 서울형 상생협력모델 개발
  - MOU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실행가능성 제고
  -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교류 효과성 향상

### 3

## 서울-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

우리시 혁신정책을 타 광역·기초 지자체와 공유 및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

### □ 추진 방향

- 단순 현장방문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학습운영을 통해 서울정책 이해도 증진
- 지역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 컨설팅으로 지방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서울-지역간 정책공유 플랫폼 「서울혁신로드」 (지방→서울) 운영: 10개팀, 204명
  - 코로나-19 확산 방지 운영지침 수립 및 온·오프라인 연수 시행
  - 연수 참가자 DB를 활용한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 실시(뉴스레터 총11회 발송)
- 지역 정책현장 컨설팅 「찾아가는 혁신로드」 (서울→지방) 운영 : 3개 지자체
  - 괴산군(도시재생 분야), 경남(청년 분야), 남해군(청년 분야) 대상 지역현장 컨설팅

### □ 향후 계획

- 코로나-19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「서울 혁신로드」 운영 내실화
  - 비대면 정책연수 진행, 온라인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 마련
  - 지역수요 반영 및 방문지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 다각화 및 신규방문지 개발
- 「찾아가는 혁신로드」 요청 지자체 정책컨설팅 : 2개 지자체(전남 광양시, 부산 영도구)
  - 참여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(4월) 결과에 기초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
    - ※ 전남 광양시(관광 활성화), 부산 영도구(청년정책)
  - 심도 깊은 정책 분석·논의를 통해 정책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

## 4 '외국인 명예시민' 선정 및 운영

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, 우리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□ 운영 근거

-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(제11조)

### 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1958년부터 ~ 현재 ※ 누적수여자 현황('20.8월말) : 총 99개국 858명
- 수여대상
  - 우리시에 계속 3년(또는 누적 5년)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,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    - ※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
  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
- 후보자 추천 :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
- 수여절차



- 관리 및 활용방안 : 서울시정 참여 기회 확대, 정기적 시정소식 제공 등
  - 외국인투자자문회의(FIAC) 등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, 市 주최·주관 국제행사 참여 등 명예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로 시정참여 기회 확대

### □ 추진 내용

- 추천 공모('20.6.8. ~ 7.17, 6주간) : 29개국 37명 접수
-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('20.7.29.) : 17개국 19명 선정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동의안 제출('20.9월)



〈 2019 명예시민의 날 〉

### □ 향후 일정

- 2020 명예시민의 날 개최(11.5) : 수여식 중심 행사규모 최소화(코로나 상황 반영 추진)
  -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,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

## 5

#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

市 관내 민간 비영리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도시 지원사업으로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, 우리시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

### □ 추진 방향

- 市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,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제교류 분야에서 시와 민간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
-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외도시 우호관계 구축 및 우리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

### □ '20년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
- 소요예산 : 총 195백만원
- 지원분야 : 아시아지역 「아동 교육환경」 및 「취약계층 보건위생」
- 선정기준 : 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, 코로나19 안전 확보 준비성 등
- 선정결과 : 공모를 통한 8개 단체 선정(교육 3, 보건 5)
  - 교육분야 :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지역의 초등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
  - 보건분야 : 취약계층 밀집 지역 코로나19 의료 물품 긴급 지원 등 5개 사업
- 기대효과 :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고, 市 정책 수출 및 관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

#### 〈 '19년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성과 〉

- ▶ 선정사업 :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하여 「아동 지원사업」 9개 실시
  - 인도 한센인마을 아동 보건위생지원, 베트남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교육 등
- ▶ 소요비용 : 총 233백만원 (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)
- ▶ 사업성과 : 아시아 개도국 아동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, 컴퓨터 교육, 의료지원 등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市 위상강화 및 해외도시와 우호관계 구축

### □ 향후 일정

- 사업별 중간 평가 실시 및 2차 보조금 교부 : 2020. 9.
- 사업별 회계감사 실시,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: 2020. 12.

## 6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

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속에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市 방역정책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외교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

### □ 추진 방향

- 우리시 코로나19 우수 방역정책 사례를 해외 도시들에게 적극 홍보
- 전염병 공동대응 위한 시장회의,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리더십 발휘
-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도시외교 지속 추진

### □ 추진 내용

#### ① 비대면(언택트)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와 교류협력 강화

- 도시, 중앙정부, 대학 등 비대면(언택트) 방식으로 **교류협력 대상 다양화**
  - 아테네, 이스탄불 등 도시정부와 통화, 독일 연방총리실, 콜롬비아 부통령 등과 화상회의
  - C40 회원도시, 美 Plug&Play CEO, 스탠포드大 장학생 등과 다자간 화상회의 참여
- 국제기구 회원도시 대상으로 **市 방역정책 공유 및 도시간 대응책 논의**
  - 국제기구(CityNet, WeGo, GSEF, Metropolis)를 통해 市 방역정책 노하우 홍보
  - UNDP, UNDRR 등 UN기구에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 방법 등 우수정책 공유

#### ②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**도시 간 교류 활성화 주도**

- **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개최**
  - 도시별 코로나19 대응사례·토론을 통한 도시별 경험 공유, 협력방안 논의
  - 감염병 발생시 선제적 공동대응 위한 도시간협의체 설립제안 등

#### <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>

- 일 시 : '20. 6. 2(화) 22:00 ~ 24:00
- 진행방식 : 무관중 화상회의(유튜브 생중계)
- 참석 : 42개 해외도시 (런던, 메릴랜드, 자카르타, 모스크바 시장 등)  
※ '20.8.24.현재 유튜브 조회수 765만뷰

- **코로나19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(Cities Against COVID-19) 운영**
  - 서울시 코로나 대응책 종합 정리자료(Fight against COVID-19)게재
  - 선별진료소, 드라이브 스루 등 혁신적인 방역정책 및 방역물품 정보 공유
  - 각 도시 주요정책 및 요청사항 게시, 질문 답변 등 도시간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
  - ※ 플랫폼 개설('20.4.9.)이후 현재까지 11백만 뷰 이상 기록 중

## □ 추진 계획

### ① 해외도시·국제기구와 연대·협력을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

- **코로나 시대 도시간 국제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텔아비브시 영상회의**
  - '20.9.15.(화)/ 부다페스트, 칸, 충칭, 밀라노, 모스크바, 바르셀로나 등 18개 도시
  - 코로나19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도시교류 전략 및 방향 논의
- **코로나 대처,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애틀랜타시 Virtual Summit**
  - '20.9.23.(수)/ 애틀랜타, 암스테르담, 상파울로, 서울시 등 4개 도시
  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정책 전략 논의
- **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20 영상 시장회의**
  - '20.9.30.(수)~10.2.(금)/ U20 45개 회원도시 시장 등
  -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,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논의
  - ※ 회의내용은 '20년 G20 회의(11월, 사우디 리야드시)에 도시 의제로 제출

### ② 해외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

- **서울-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중국의 날(온라인) 행사 개최('20.10월~)**
  - 서울 페스티벌 사이트를 통하여 분야별 콘텐츠·영상을 활용한 상호 문화교류
  - 서울·중국의 날 소개, 문화콘텐츠(전통 희곡·무용, 수공예품 등), 관광명소 소개 등
- **홋카이도 우호도시 협정 10주년 기념 도서교류 추진('20.10월~)**
  - 지속적인 도시교류를 통해 미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
  - 시장·도지사 영상기념식, 양 도시 도서관에 상호 도서 기증(100여권) 및 전용코너 설치

## □ 향후 일정

- 해외도시·국제기구와 영상회의 등을 통한 의제별 협력 지속 : 2020. 9월~
- 포스트 코로나 대비, 도시외교 전략수립 및 실행모델 마련 : 2020. 9월~

## 7

##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

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를 통해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

## □ 추진 방향

- 스마트 도시, 감염병 대응,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해외 수요에 부합하는 서울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
- 市·유관기관·민간기업 전방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시너지 창출
-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자원 유치



## □ 추진 내용

- 민간기업과 해외수요 반영한 **수출 콘텐츠 발굴**로 해외사업 분야 **다변화**
  - **K-방역 서울형 표준 모델 개발** 및 방역기업 해외진출 지원
    - ▶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(9월~12월)
    - ▶ 방역, 지원정책 등 종합적 방역정책 정리 및 해외도시 유형별 방역모델 개발
      - ※ 방역물품 기업 해외도시 매칭 상담회 및 서울방역정책 컨설팅 실시 예정('20, 11월)
  - **'폐기물' 분야 모델 개발** 및 시범사업 추진
    - ▶ 해외 도시 폐기물 매립지 현황(규모, 매립량 등) 자료 분석(25국 35도시, 1~3월)
    - ▶ 폐기물 분야 발주 동향 및 수요, 정책 상품, 진출 전략 등 **수출 매뉴얼 제작**(4~9월)
      - ※ 인도네시아 팔렘방 등 2~3개 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발굴 추진 ('21년)

○ **유관기관(KOTRA, KOICA 등), 민간기업(건화 등 22개) 협력을 통한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추진 : 25건**

- 선정 사업 : 엘살바도르 광역교통체계 개선(1월) , 자카르타 대중교통 개선(3월) 등 8건
  - 신규 개발 : 페루 리마 스마트도시 ,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시설개선 시범사업 등 9건
  - 입찰 참가 : 미얀마 철도역량강화,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8건
- ⇒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사업추진(자카르타 대중교통개선 등 선정사업 온라인 보고회·연수 실시, 중남미 등 신규사업 기획 현지기관과 수시 화상회의 개최, 현지 인력 활용 현지조사 실시 등)

○ **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**

- 우수정책 강의영상 콘텐츠 개발(방역, 교통, 스마트시티, 문화 4과목)
- 서울형 방역정책 공유, 화상회의 기능 추가 등 서울정책아카이브 플랫폼 기능 강화

○ **우수정책 진출 효과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**

- 민간기업,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**민관협력포럼** 개최(7월, 11월)

※ K- 방역 민간기업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민관협력포럼 개최('20.7.2)

▶ 참가 :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,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, 코트라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

방역물품기업(씨젠, 그린 퓨어텍) / 온라인 생방송 방영(라이브서울 유튜브 \* 누적조회 : 8.1천회)

○ **전략적 국제평가상 참여로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**

- 「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」 수상 추진(2~4월, 서울로 7017 등 6건 / 11월 선정)
- 「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」 수상 추진(10월 신청/ '21년 선정)
- 2021년 「UN 공공행정상」 수상 추진(11월 신청/ '21년 6월 선정)

□ **향후 일정**

-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발굴·입찰참가·수행 : 연간
- 국제평가상 참여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: 연간
-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: '20년 11월
- 서울 방역정책 컨설팅 및 방역물품기업 해외도시 상담회 : '20년 11월
- 우수정책 강의 영상 콘텐츠 개발 : '20년 11월
- 코로나19 감염병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: '20년 12월

## 8

# 국제기구 교류·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

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

### □ 추진 방향

- 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 확대로 국제적 어젠다 대응 및 공동 문제 해결
-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

### □ 중점 추진내용

-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**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및 市 우수 정책 전파**
  - 국제기구 주최 웨비나에 참석하여 市の 코로나19 대응 우수 정책 소개
    - ▶ UNDRR(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, 4월), UNDP(유엔개발계획, 5월), 시티넷(5월)
  - 국제기구 뉴스레터, 메트로폴리스 온라인 플랫폼 등에 市 방역 정책 게재(3월)
- **市-국제기구간 협력 활동 다변화로 국제사회의 기여 범위 확대**
  - UCLG WORLD 집행부회의(5월), 메트로폴리스 임시 이사회(7월) 참석
  - 시티넷 회원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(4회),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 지원
  -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원도시간 우수 정책 공유 추진
- 국제기구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한 **전용공간 추가 확보 추진**
  - 기부채납시설(문배업무지구)을 활용한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검토

### □ 향후 일정

-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: 연간 계속
-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 제안(보고타-마드리드-서울 공동) : '20년 9월
- 시티넷 집행위원회 참가 \*온라인 : '20년 10월
- UCLG WORLD 이사회, 메트로폴리스 임시 총회 참가 \*온라인 : '20년 11월
- 청년층을 위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: '20년 11월

## 9

# 서울-과야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·웨비나 개최

서울시-과야킬시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 체결 및 정책공유 웨비나를 통해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 진출 및 민간기업 사업기반 조성

### □ 추진 배경

- 코트라(중남미 본부 무역관) 서울시에 **스마트시티 정책 공유 요청 및 사업추진 제안**
- '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' 수요가 높은 '중남미' 시장에 **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**

### □ 행사 개요

- 일 시 : '20. 10월초 08:00~09:40(과야킬 18:00~19:40) ※ 일정 협의중
- 장 소 : 서울시청 영상회의실, 과야킬시청
- 개최방법 : 비대면, 온라인 방식(서울시 공식유튜브 방송)
- 참 석 : 서울시·과야킬 등 도시정부 관계자, 코트라 무역관 관계자, 국내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 등 100 여명
- 주요내용 : 양도시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체결 및 정책 공유
  - 개회사(시장권한대행/과야킬시장), 축사(코트라 중남미본부장/IDB), MOU 체결
  - 정책발표(과야킬 스마트도시계획 및 현황, 서울 스마트 정책, 서울시 제언), 질의응답

### <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>

- ✓ 목 적 : 에콰도르 최대도시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통한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 도시 모델 확산과 관련 민간기업 진출 견인
- ✓ 기간/사업비 : '21. ~ / 미정
- ✓ 내 용 : 디지털 교육 보간·교통,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
- ✓ 경 과 : 민관협력포럼('19.7), 현지 **코트라 사업 추진 협력 요청** 현지조사('19.9), 기재부 지식공유 사업(KSP, 5억) 신청, CAC써밋 참가 ※화상회의 : 5회(코트라, 과야킬시, 수출사업단, 서울시)
- ✓ 향후계획 : KSP 입찰('21. 3.), 국토부 글로벌협력사업·EDCF 차관 등 활용 사업 추진

### □ 향후 일정

-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및 웨비나 개최 : '20년 10월
- 기재부 KSP(지식공유사업) '21년 대상사업 선정 발표 : '20년 12월
- 국토부 K-CITY 글로벌협력사업(도사개발형/10억) 민간기업과 협력추진 : '21년 3월